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10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김기열 의원 등 5명(배용식, 안영란, 원종진, 조복희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10.)

2. 제안이유

-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의 체불을 방지 하고자 마련 된 본 조례에서 체불사업체 공개에 대한 조항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명단공개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「근로기준법」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임금체불사업체의 구 홈페이지 공개 조항 삭제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: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8조(공개)에서 구청장이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은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체불사업체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처음 조례를 제정할 시점에 충분히 검토 되었어야 할 법리적 해석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,
- 체불자 공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우리구 관련 사업에서 체불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고, 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면 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